

‘김은경 혁신위’ 출범... “혁신 저해 언행 관용 없다”

민주 혁신기구 1차 회의

김 “난 친명도, 비명도 아니다”
인권·복지 등 혁신위원 7명 인선
첫 의제로 ‘돈봉투 사건’ 다루기로
이재명 “혁신기구안 전폭적 수용”

더불어민주당을 전면 쇄신할 ‘김은경 혁신위’가 20일 본격 출범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각종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민주당이 처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저는 정치권에 빛이 없는 사람이 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도 아니다”며 “계파의 이익과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다”며 “민주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

전환에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진상조사를 첫 번째 의제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 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가장 기초사건이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일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걸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별도로 봐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원회는 윤리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에 되도록 하겠다”며 “기득권을 타파한 민주당, 개혁정당의 모습을 찾도록 하겠다. 정당이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혐오를 일으킨다”며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는 윤리 회복을 넘어 정치

회복까지 제안하고자 한다”며 “반대편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감싸안은 포용과 확장의 정당, 당원을 존중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위원으로는 인권·복지·국제 위기관리 등 사회 각 분야 원내·외 전문가 7명이 선임됐다.

외부 인사는 김남희 변호사, 유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물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 5명이며, 당내 인사는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산시장 위원장이다. 앞으로 여성과 청년 위원 등 추가 인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영덕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토론회

23일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8층)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방류 결정의 문제점과 방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먹거리 등 광주·전남지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갑 공동의장(광주환경운동연합)이 좌장을 맡고,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 최경숙 활동가(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지역 먹거리 대응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박미정 사무국장((사)광주전남소비시민모임), 문정은 위원장(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김선미 위원장(진보당 광주광역시당 환경위원회), 강채식 협회장(완도문어단지협회), 김경희 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기현 “이재명 연설은 궤변... 文은 반쪽짜리 대통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민주 ‘남 탓으로 점철’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 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소수성 실험으로 자영업을 쪼개 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인가”라며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정망청 나라살림 탕진이 바로 민생 포기, 경제 포기”라며 문제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 검수완박, 영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제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며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시

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한다.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겠다. 그리고 달라지겠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

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런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달라”며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 정권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으로 점철된 공격적 언사들이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남 탓으로 점철된 야당 대표의 연설은 일찍이 없었다”며 “집권 야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재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투쟁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방사능 테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일본의 해양방류에 명분만 주었고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선동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내고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소병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선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와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입법 과제가 산적하다”며 “간사로서의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 입법이 법사위에서 신속히 통과되고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사·견제 역할도 충



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소 의원은 “호남 지역 구 출신 유일한 법사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원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순천·호남 발전에 큰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尹 ‘쉬운 수능’ 논란에 “최악의 교육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란과 관련해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능의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며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

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면서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 했다”며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시제도 등은 국가교육위에 맡기는 게 맞다”며 “1등만 기회 갖는 불평등 사회가 있는 한 모두가 1등을 향해 달려간다. 교육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공정 입시가 아니라 평등사회다. 경쟁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선욱 기자